

산업화와 여성: 산업화가 젠더폭력과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장기 효과*

박서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권혁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논문요약

대규모 중화학공업 산업화는 여성의 삶에 어떠한 장기적 효과를 갖는가? 이 논문은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1970년대 산업단지 조성 여부가 여성폭력 상담 건수, 피해자 지원 건수, 여성 투표율에 미친 장기적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산업단지 지역은 비산업화 지역에 비해 여성폭력 상담 및 지원이 많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가 있는 시군에서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상담과 지원 제도의 활용이 줄어들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제조업의 남성 노동자의 비중이 클수록 여성투표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시장 내 젠더 불평등을 경험하고 젠더폭력에 더 노출되는 동시에 제도를 활용하거나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산업화가 젠더 불평등을 어떻게 형성하고 재생산하는지, 그리고 여성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젠더화된 정치경제 구조의 장기적 효과를 보여준다.

주제어: 산업화, 젠더 불평등, 여성폭력, 여성 유권자, 정치적 참여, 경상남도

* 좋은 논평과 제안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RF-2022S1A3A2A01089543).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이 논문은 1970년대 한국에서 중화학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단지가 유치된 경상남도 지역에서 나타난 젠더 불평등의 장기적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화가 수반하는 성별 제조업 고용 불평등, 임금 격차, 그리고 고용불안정 격차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및 제도적 지원에 어떻게 연결되며, 여성의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의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산업화로 인해 도농 갈등과 빈부격차가 심화하였지만, 사회복지와 불평등 완화는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다음에 위치하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개별 가족에게 거의 전가하는, 유교적 전통과 관습에 입각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¹⁾ 산업화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의 상징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한국의 불평등과 소외를 심화시킨 과정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경상남도에서 1970년대 산업단지가 유치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젠더 불평등은 유사하다고 전제한다. 농업 중심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가부장제적 전통과 규범에서 비롯되는 젠더 불평등 때문이다. 이 연구가 초점을 두는 것은, 이러한 동일한 가부장제적 규범을 갖는 지역 중 산업단지가 유치되어 산업화가 진행된 지역과 농업 중심의 생산구조가 대체로 유지된 비산업화 지역에서 젠더 불평등의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산업화와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이 수반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여성폭력 및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를 분석하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젠더 불평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1) Han, Jongwoo, and L. H. M. Ling, "Authoritarianism in the Hypermasculine State: Hybridity, Patriarchy, and Capitalism in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2, No. 1, 1998, pp. 53-78; 김수영,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가족여성." 『뉴 래디컬 리뷰』 제7권, 2001, pp. 58~64;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제16권 1호, 2000, pp. 41~47.

따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영남 지역의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상남도 여성들에게 실업 교육과 일자리의 기회가 일부 주어졌지만, 제조업 현장에서의 여성 노동은 여전히 일시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²⁾ 결국 산업화의 대표적 수혜 지역이었던 경상남도에서 많은 여성 노동자가 주변화(marginalization)되었다. 주변화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체계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뜻한다.³⁾ 이들은 주로 저임금·저숙련 위주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사회적 안전망과 법적 보호 없이 차별과 착취를 겪었으며, 남성 중심 산업구조는 이러한 경제적 제약을 더욱 심화시켰다.

남성중심 산업 내 성별 직무 분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성을 유지하고 여성의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⁴⁾ 결국 1970년대부터 이어진 제조업 내 성차별 시스템은 젠더 권력관계에서 여성을 더욱 취약한 위치로 몰아넣었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산업화 과정에서 젠더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제도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치참여 양상은 어떠한지에 관해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경상남도는 박정희 정권 시기 산업화 정책의 수혜 지역이자 현재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다.⁵⁾ 제조업 중심의 남성 위계적 노동시장 구조는 많은 여성을 비정규직, 저임금·저숙련 노동으로 배치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해 왔다. 한편, 경상남도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여성폭력방지 조례」는 2024년 기준 인천광역시와 함께 유일하게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자유권’과 ‘예방 의무’를 명문화하였으며, 여성폭력 통

2) 백승아, “1980년대 울산지역 여성운동: 지역의 공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 주체 형성을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제14권 2호, 2023, p. 23.

3) 송영호·최영미, “이주배경청년의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 국적과 출생지, 젠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22권 2호, 2021, p. 10.

4) Hartmann, Heidi, “Capitalism, Patriarchy and Job Segregation by Sex,” *Signs*, Vol. 1, No. 3, 1976, pp. 138~139; 김경희, “여성노동자의 작업장 생활과 성별분업: 197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1권 1호, 2005, pp. 190~193.

5) 2023년 기준 경상남도의 산업단지는 208개, 그중에서도 국가공단은 9개. 경상남도 전체: 국가 9개(61,101천 제곱미터), 일반 117개 (65,467 천 제곱미터), 도시첨단 1개(14천 제곱미터), 농공 81개 (11,891천 제곱미터)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별 현황지도)

계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⁶⁾ 즉, 경상남도는 산업화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과 동시에 제도적 대응의 기반이 병존하는 지역적 맥락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1970년대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이후, 오늘날 여성폭력 상담 건수, 피해자 지원 건수, 그리고 여성 투표율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불평등한 구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여성의 제도 이용과 정치 참여는 억압의 결과, 혹은 제약된 조건에서의 선택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상담 및 지원 건수가 피해의 실제 발생 수준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제도 접근성과 대응 역량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이러한 지표가 갖는 이중적 맥락을 고려한다. 특히 여성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할수록 여성 보호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커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산업화 지역과 비산업화 지역의 비교적 시각을 통해 고용 형태, 임금 격차, 남성 중심의 작업장 환경 등 산업화가 수반하는 노동시장 메커니즘이 창출하는 젠더 불평등 효과를 검토한다. 우리의 경험적 분석은 산업화 지역과 비산업화 지역의 비교를 통해 대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연속변수로 측정되는 여성고용률의 지리적 편차로 대체하여 분석을 보완한다. 또한, 제조업 중심 노동시장에서 성별 직종 분리가 심화하더라도, 산업화 지역의 제도적 인프라와 자원,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에 따른 학습효과는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화의 효과가 제조업 종사자 성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여성 투표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경상남도 지역 중 19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여성폭력 상담과 피해자 지원 건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여성고용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산업단지의 존재가 여성폭력 대응 제도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으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으로써 작업장 내 성평등 규범과 문화가 확산하는 동시에 여성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활용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제조업 종사자의 성비가 높을수록(즉 남성중심적인 구조일수록), 산업단지가 여성

6) 박미현, “광역자치단체의 여성폭력방지 조례에 관한 비교연구.” 『글로벌사회복지연구』 제14권 2호, 2024, pp. 33~34.

투표율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관측된다. 남성 성비가 높은 곳일수록, 즉 남성중심적인 제조업이 많은 지역일수록 여성의 투표율이 증가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이는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지역에서 여성의 분노와 저항의 정치적 표출로서 여성 투표율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정치경제 및 젠더정치 연구에 기여한다. 첫째, 중화학 공업화 중심의 경제발전이 젠더 불평등에 미치는 장기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최근 들어 역사정치경제(historical political economy) 분야에서 역사적 기원이 미치는 장기 효과를 분석하거나, 현재 정치적, 경제적 결과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는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축적됐다.⁷⁾ 이 연구는 1970년대 산업화가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 메커니즘을 통해 현재 경상남도 여성들의 제도적, 정치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장기적 시각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여한다. 한국의 산업화가 미친 장기 효과를 분석한 최근 중요한 연구들과 문제의식이 맞아 있다.⁸⁾ 둘째, 그동안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 산업화와 젠더 불평등에 관해 탐구해 온 반면에, 이 연구는 정량적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산업화와 여성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물론,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모두 활용한 연구가 더 바람직하겠으나, 여기에서 정성적 방법을 활용한 심층적 사례 연구까지 수행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셋째, 기존 산업화와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과 구조적 피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연구는 산업화가 만들어낸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도 여성들이 어떻게 제도를 활용하고 정치 참여를 했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여성은 폭력이나 구조적 차별 등 산업화의 부작용을 ‘감내’하는 존재가 아니라,

7) Jenkins, Jeffery A., and Jared Rubin, editors, *The Oxford Handbook of Historical Political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4.

8) Hong, Ji Yeon, and Sunkyoung Park, "Factories for Votes? How Authoritarian Leaders Gain Popular Support Using Targeted Industrial Polic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6, No. 3, 2016; Hong, Ji Yeon, Sunkyoung Park, and Hyunjoon Yang, "In Strongman We Trust: The Political Legacy of the New Village Movement in South Kore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7, No. 4, 2023.

노동시장의 젠더 권력 구조 속에서 이에 대응하고 제도적 반응을 보이는 정치적 행위자라는 점을 제시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경상남도 산업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하였는지 서술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여성들이 어떻게 정치적·사회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가설을 제시한다. 3절에서는 자료 및 변수와 분석 방법을 검토하고 4절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을 논의하면서 마무리한다.

II. 산업화와 여성

1. 한국의 산업화 전략과 젠더 불평등의 형성

박정희 권위주의 시기 동안 국가는 대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했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통제하였다. 특히 저임금의 유지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제였다.⁹⁾ 산업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저곡가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하였고, 특히 많은 미혼여성들이 저임금 노동자로 취업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은 열악한 고용 지위와 임금 조건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결혼 전후에도 여전히 가계보조적인 소득을 버는 위치에 놓여있었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복지체계는 가족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였다.¹⁰⁾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전략이 젠더 권력관계에 미친 영향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정 정책의 효과가 젠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각 국가의 제도 형성과정과 특정한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¹⁾ 그리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발전국가를 비판하면서 초남성주의적

9) Ogle, George E., *South Korea: Dissent within the Economic Miracle*. London: Zed Books, 1990.

10) 강이수,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미니즘 연구』제7권 2호, 2007, pp. 9~15; 김수영,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가족여성.", pp. 64~66.

발전국가(hyper-masculinized developmental state)라는 개념을 통해 아시아의 발전국가들이 가진 가부장적 특성에 주목하기도 하였다.¹²⁾ 그리고 밥 제섭(Bob Jessop)은 국가 제도 및 정책은 전략적으로 사회의 가부장적 특성이나 젠더 위계를 이용하거나 생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젠더 선택성(gender selectivities)'이라는 개념에 기반하여 국가 정책들이 젠더화된 전략들을 어떻게 형성하며, 그 사회적 효과가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국가 헤게모니 프로젝트 내에서 국가 정책 간의 상호작용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젠더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였다.¹³⁾ 이러한 젠더 선택성 관점에서 한국이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에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정책이 여성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산업화의 시기별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먼저, 1960년대에는 수출지향적 산업화 전략으로 인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성장하였다. 안이슬과 박보영의 연구는 노동집약적이고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여성고용률이 늘어난다고 밝혔다.¹⁴⁾ 노동청이 1973년에 발행한 『한국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1966년 기준 천 명 이상의 산업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
- 11) Dahlerup, Drude, "Confusing Concepts - Confusing Reality: A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Patriarchal State." In Anne Showstack Sassoon, ed., *Women and the State: The Shifting Boundaries of Public and Private*, London: Unwin Hyman Ltd., 1987. pp. 93~127; Hernes, Helga Maria, *Welfare State and Woman Power: Essays in State Feminism*. Norwegian University Press, 1989; Rai, Shirin M., "Women and the State in the Third World: Some Issues for Debate." In Shirin M. Rai ed., *Women and the State: International Perspectives*. London: Taylor & Francis, 1996. pp. 5~22; Waylen, Georgina, *Gender in Third World Politic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6.
- 12) Han, Jongwoo, and L. H. M. Ling, "Authoritarianism in the Hypermasculine State: Hybridity, Patriarchy, and Capitalism in Korea." p.54;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p. 41.
- 13) Jessop, Bob, *State Power: A Strategic Relational Approach*, Cambridge: Polity Press, 2007; 이지연, "산업화 시기 한국 국가의 인력 양성 정책과 젠더 불평등 : 1970년대 실업교육 정책과 기술 담론을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제39권 1호, 2015, p. 143.
- 14) 안이슬·박보영, "기업 특성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시아 6개국 제조업 기업 통계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경제발전연구』 제23권 3호, 2017, pp. 76~77.

약 2만 명 이상 많았다.¹⁵⁾ 그러나 경공업 중심 노동집약적 산업은 임금이 낮고 고용 유연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은 공장에서 일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1970년대에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구조적 전환이 이뤄지면서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이 성장하였다. 이지연은 그 과정에서 시행된 인재양성정책이 어떻게 여성을 배제하였는지에 주목한다.¹⁶⁾ 급증한 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국가가 실시한 핵심적 실업교육으로 추진된 ‘공고특성화정책’이 성별 분리로 이어졌고 노동시장 내 성별 간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은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기술인력의 충원’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노동력 재편성을 시도하였다. 당시 중화학 공업의 여성 노동자 비율도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나 이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러한 성별 격차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2009년 대비 2017년에도 여성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1980년대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음에도 남녀 간 실질임금의 격차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여성 노동자 중 73%가 중졸 이하였으며 이들의 임금은 남성 고졸자의 절반도 되지 못했다. 이지연은 학력 요인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보다 실질 임금 수준에서 차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¹⁸⁾ 그리고 이현영 외의 연구는 직종에 따른 성별 임금 격차의 지역별 편차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¹⁹⁾ 2023년 한국여성정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전체 산업 중 농업, 금융, 국방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다.²⁰⁾ 이러한 맥락에서 제조업이 많은 지

15) 김춘수, “1960~70년대 국가의 여성 배제 전략: 기술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2권, 2003, p. 73.

16) 이지연, “산업화 시기 한국 국가의 인력 양성 정책과 젠더 불평등 : 1970년대 실업교육 정책과 기술 담론을 중심으로.” pp. 145~158.

17) 김춘수, “1960~70년대 국가의 여성 배제 전략: 기술교육훈련을 중심으로” pp. 77~82.

18) 이지연, “산업화 시기 한국 국가의 인력 양성 정책과 젠더 불평등 : 1970년대 실업교육 정책과 기술 담론을 중심으로.” p. 157.

19) 이현영·임업·최예슬·김민영, “수도권 임금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 직종 속련특성에 따른 직종 간 임금격차와 직종 내 성별 임금격차.” 『지역연구』 제30권 4호, 2014, pp. 4~5.

20) “남녀 임금 격차 40% 넘는 지역은 '전남·울산...이유는?’ 『연합뉴스』 2023년 6월 27일.

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자 비율이 낮고 성별 임금 격차가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산업화와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은 제조업의 성별 분리와 더불어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이 고착화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여성 고용 확대는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성별 분리는 단지 한 시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화학 공업 중심 재편과 더불어 여성의 기술직 진입이 차단되면서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노동시장 내 차별'에 그치지 않고, 국가 주도적 산업화 전략이 선택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거나 주변화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한국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이 교육,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함께 시행되었던 과정에서 구성된 것이었다.

2. 산업화, 노동시장 내 젠더 불평등, 그리고 젠더폭력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자로서 지위 변천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역할의 재구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산업화가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비정규직·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고착화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어떠한 위협을 초래하는지 그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화의 영향을 다층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을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정치 참여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따르면 젠더폭력은 “여성이란 이유로 혹은 여성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다.²¹⁾ 다시 말해, 젠더 권력관계에서 파생된 성차별적 인식에 기반해 여성에게 저질러지는 폭력이다. 산업화에서 비롯된 여성의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은 여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6112800530?input=1195m>(검색일:2025.4.25.).

21) 김현경, “국제인권체제에서의 ‘젠더폭력’ 개념의 형성.” 『아시아여성연구』 제63권 2호, 2024, p. 52.

전히 여성의 경제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균등한 젠더 권력 관계를 형성하고 가정 내 폭력, 직장 내 성희롱 등 젠더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²²⁾ 구체적으로 여러 연구들은 부부 간의 상대적 자원의 문제로 가정폭력에 접근한다. 결혼의존 이론에 따르면 부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이 결혼에 더 의존하며 가정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여성이 취업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남성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낮아진다.²³⁾ 에이저(Aizer)는 성별 임금격차가 가정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²⁴⁾ 남녀의 임금격차가 줄어들면 가정 내 협상 모델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은 단지 성별 간의 소득 수준 차이를 넘어, 여성들의 사회적 취약성과 폭력 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젠더폭력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문제로 인식하거나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²⁵⁾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산업화 지역과 비산업화 지역 모두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규범과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 전제한다. 동일한 가부장제적 규범과 문화의 영향력을 전제하면, 젠더 불평등과 젠더폭력과 관련하여, 두 지역의 차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거나 제조업 종사자 남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젠더 불평등과 차별 및 폭력의 차이라고 본다. 젠더폭력에 대한 여성의 대응은 무기력한 침묵에서 적극적 대처까지 다양하다. 피해자는 상담 시설이나 지원 제도 같이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높을수록 이를 활

22) 신상숙,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 통합적 접근의 모색.” 『페미니즘 연구』 제18권 1호, 2018, pp. 278~282.

23) Tauchen, Helen, and Ann Dryden Witte, “The dynamics of domestic viol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No. 2, 1995, pp. 414~418; Kaukinen, Catherine, “Status Compatibility, Physical Violence, and Emotional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6, 2004, pp. 453~455.

24) Aizer, Anna, “The Gender Wage Gap and Domestic Viol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0, No. 4, 2010, pp. 1847-1859.

25) Hamby, Sherry L., and Bernadette Gray-Little, “Responses to Partner Violence: Moving Away from Deficit Model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1, No. 3, 1997, p. 339.

용해 젠더폭력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은 각자의 자원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해자,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중단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될 때 더 적극적으로 결정한다.²⁶⁾ 여러 형태의 경제적, 제도적 자원이 여성들로 하여금 지지체계를 확보하면서 폭력에 대처하고 재폭력을 예방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의 여성폭력 대응 정책은 여성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제도는 관련 범죄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 간접적인 판단의 준거가 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지이며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제도적 학습의 결과,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이 상담 및 지원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단지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한 저임금 및 고용 불안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여성폭력과 정치소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업화 지역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여 여성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 발생에 대한 데이터는 부재하지만, 여성폭력 대응 제도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 건수는 피해 발생의 실제 빈도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피해에 대한 인식 증가, 제도 접근성 확대, 대응 역량 강화의 결과일 수도 있다. 여성이 불평등을 경험할수록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과 피해여성의 수요는 더욱 커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26) Liang, Belle, Lisa Goodman, Pratyusha Tummala-Narra, and Sarah Weintraub,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elp-seeking processes among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6, No. 1-2, 2005, pp. 71~84.

27) Bybee, Deborah I., and Cris M. Sullivan, "The process through which an advocacy intervention resulted in positive change for battered women over tim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0, 2002, pp. 113~121 ; Goodman, L, Ma Dutton, N Vankos, and K Weinfurt, "Women's resources and use of strategies a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reabuse over time." *Violence Against Women*, Vol. 11, No. 3, 2005, pp. 330~332.

여성의 여성폭력 상담 수는 증가할 것이며 경제활동 수준은 폭력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즉 상담 및 지원 제도의 이용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한다.

가설 1-1: 산업화 지역은 비산업화 지역에 비해 여성폭력 상담 수 및 피해자 지원 수가 클 것이다.

가설 1-2: 산업화가 여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약화될 것이다.

3. 산업화, 노동시장 내 젠더 불평등, 그리고 여성 투표율

투표참여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국내 및 해외 연구에서 많이 축적됐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투표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왔다.²⁸⁾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시간이나 정치정보 수준 등 정치참여를 쉽게 만드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메커니즘으로 설명된다.²⁹⁾ 한국의 투표참여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소득보다는 지역, 세대, 이념에 따라 투표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경향이 강했다.³⁰⁾ 또한 선거경합도와 정치적 이념 성향 등 선거국면적 변수나 정치적 요인으로 투표참여를 설명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다.³¹⁾ 그런데 한국 선거연구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연령과 투표참여의 관계는 분명하게 드러

28) Raymond E. Wolfinger and Steven J. Rosenstone,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29) 권혁용·한서빈, “소득과 투표 참여의 불평등: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 『정부학연구』 제24권 2호, 2018, p.67.

30) 강원택,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파주: 나남, 2010; 이갑윤,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제26권, 2008, pp. 93~116.

31) 조성대,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제40권 2호, 2006, pp. 51~74; 한정훈·강현구,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행위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사례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8권 1호, 2009, pp. 51~82; 황이란, “선거환경변화가 당선경쟁과 투표율에 미친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2호, 2008, pp. 83~109.

나지만, 소득과 투표참여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서복경은 같은 선거들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의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³²⁾ 마찬가지로 김성연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 투표참여 집단과 불참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소득의 차이가 뚜렷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³⁾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갈등이론(conflict theory)과 상대적 권력이론(relative power theory)에 기반한 접근으로 나뉜다. 갈등이론(conflict theory)에서는 불평등한 상황에 처한 유권자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상대적 권력 이론(relative power theory)은 정치참여를 자원의 문제로 접근한다. 저소득층은 정치참여를 통한 효능감이 낮고 고소득층이 전파하는 규범을 내면화하면서 정치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참여에는 시간과 돈, 정치적 지식 등을 포함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은 정치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³⁴⁾ 즉, 이 이론은 자원과 인센티브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은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투표참여가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다.³⁵⁾

잉글하트와 노리스(Inglehart and Norris)는 산업화 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전통적 가족의 해체 등으로 여성들이 능동적인 유권자로 거듭났다고 평가한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은 여전히 불평등

32) 서복경, “투표 불참 유권자집단과 한국 정당체계,” 『현대정치연구』 제3권 1호, 2010, pp. 109~129.

33) 김성연,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 201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2권 4호, 2015, pp. 41~68.

34) Brady, Henry E., Sidney Verba, and Kay Lehman Schlozman,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9, No. 2, 1995, pp. 271~294.

35) Beramendi, Pablo, and Christopher J. Anderson, *Democracy, Inequality, and Represent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Russell Sage Foundation, 2008; Mahler, Vincent A., “Electoral Turnout and Income Redistribution by the State: A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Developed Democrac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47, No. 2, 2008, pp. 361~373.

36) Inglehart, Ronald, and Pippa Norris, “The Developmental Theory of the Gender

이다. 기존 연구들은 자원 배분의 불평등이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의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³⁷⁾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여 공적 형태의 정치참여보다는 캠페인과 같은 사적 형태의 정치참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저소득층 여성은 더 심각한 정치적 불평등을 경험한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사회적 차별로 인한 분노가 여성의 정치참여 동기가 되기도 한다고 본다. 박영민·이나영은 성차별에 불안과 공포를 여성들이 공유하며 집단적 분노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비판과 변화를 추구하는 집합적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³⁸⁾ 또한 장은영은 1970년대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도 계급, 성적 차별에 대한 불평등을 거부하고 차별에 대한 수치심을 사회에 대한 분노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⁹⁾ 여성의 정치적 야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자신의 권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질 때 정치적 참여의 동기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⁴⁰⁾ 산업화로 인해 여성이 경제적으로 주변화될수록 여성의 자원 부족과 정치적 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이를 분노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여성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화 지역의 남성중심 산업 환경은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주변화를 심화하고 여성의 정치적 효능감을 저하시켜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공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이 강화되고, 여성은 비공식적이거나 저숙련 노동에 주로 배치되면서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배제는 여성의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1, No. 4, 2000, p. 446.

- 37) Coffé, Hilde, and Catherine Bolzendahl, C, "Same Game, Different Rules? Gender Differenc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Sex Roles*, Vol. 62, No. 5-6, 2010, pp. 318~333; 김기동·이재묵, "건강상태와 투표참여의 성별 격차: 소득의 조건효과." 『정치정보 연구』 제26권 3호, 2023, pp. 5~32.
- 38) 박영민·이나영, "'새로운' 페미니스트 운동의 등장? :〈불편한 용기〉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 2019, pp. 135~191.
- 39) 장은영, "들불야학 여성 노동자의 자기서사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59권, 2014, p. 303.
- 40) Clayton, Amanda, Diana Z. O'Brien, and Jennifer M. Piscopo, "Women Grab Back: Exclusion, Policy Threat, and Women's Political Amb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17, No. 1, 2023, pp. 1465~1485.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성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내 성별 고용구조가 뚜렷할수록, 즉 남성 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은 자신의 소외를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이를 정치참여를 통한 대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

가설 2. 산업화가 여성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내 남성 노동자 비율에 따라 조건 지어진다. 즉, 남성 성비가 높은 산업화 지역일수록 여성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Ⅲ. 경험적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경상남도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경상남도는 그 지역적 경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고 산업화 시기에는 핵심적인 개발 지역이었다. 먼저 1896년 칙령 제36호에 따라 경상도를 경상남도·경상북도로 구분하였다. 경상남도는 1949년 8월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부산시, 마산시, 진주시로 이뤄진 3시 19군으로 변경되었다. 1963년 부산이 정부직할시로 승격되고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지금의 경상남도가 되었다. 《경남도정백년사》(1996)에 따르면, 1962년 공단 건설이 시작된 울산의 인구 성장률이 6.7%, 진주와 진해가 각각 4%, 3.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로의 이주가 많은 상황이었다. 1973년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창원에 기계기지, 여천(여수)에 석유화학기지, 구미에 전자기지, 온산(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비철금속 제련기지, 거제도에 조선기지 등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기계류 생산공장을 집단 유치하여 기계공업을 집중육성할 목적으로,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4년 1974년 4월 1일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창원 일대가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1974년부터 2015년까지

지 약 40년에 걸친 대단위 사업이었다.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 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자리잡았다(〈부록〉의 〈그림 A1〉과 〈그림 A2〉 참조).

2. 자료와 변수

이 연구의 분석단위는 시군-연도 수준이다. 이 연구의 설명변수는 경상남도 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의 경상남도 시군별 산업단지 여부이다. 1970년대 산업 단지가 존재했던 시군은 1, 그렇지 않은 시군은 0으로 코딩한 더미변수이다. 경상남도 행정구역의 변경을 고려하여 울산 지역은 제외하였다. 다른 한편, 산업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속변수인 여성고용률을 산업단지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한 결과를 함께 보고한다.

결과변수(outcome variable)는 2000년대 여성폭력 상담 건수와 여성폭력 피상담자, 즉 피해자에 대한 지원 건수⁴¹⁾, 그리고 여성 투표율이다. 여성폭력 상담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이 포함된다.⁴²⁾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과 지원은 실제 범죄 데이터와 달리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신청해야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성의 선택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즉, 해당 변수를 통해 여성이 제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출처는 경상남도 사회조사로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여성폭력 상담 건수는 지역별 상담소 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담소당 여성폭력 상담 건수로 조작화하였다. 한편 여성폭력 지원은 지역 상담소의 존재와 별개로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다른 종속 변수인 경상남도 시군별 여성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활용하였다. 2020년 선거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군별 여성 투표율을 발표하지 않아 이 연구에서 여성 투표율 분석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16대 부터 20대 선거이다.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는 여성고용률과 제조업 노동자 성비(여성 대비 남성)이다. 여성의 경제적 여건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며 성비는 남성 인구를 여성 인구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여성 1인당 남성 인구

41) 여성폭력상담 피해자 지원 내용은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시설입소연계 등이 있다.

42) 성매매 피해 상담은 시행되지 않는 시군이 대부분이라 제외하였다.

수를 의미한다. 성비의 값이 클수록 해당 지역 제조업 노동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통제변수로 1970년대부터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지역적 특성 및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경상남도 시군별 인구, 순 이동인구, 그리고 시군별 지방세를 포함한다. 지방세는 각 시군의 경제활동과 지역 내 경제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세수로,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의 소득 및 재산 증가가 곧바로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⁴³⁾ 이러한 점에서 지방세는 도시 성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산업화 여성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경우,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인 시군별 교육수준, 노년층 비율, 무당파층 비율과 정당일체감 패턴, 주택소유 비율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socio-economic status) 변수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이러한 통제변수들이 자료의 제약 상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누락 변수편향(omitted variable bias) 문제가 있으나, 위계적 선형모델(hierarchical linear model) 분석에 포함되는 시군별 고유한 절편(unit-specific intercept)과 연도별 고유한 절편(year-specific intercept) 추정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 시군별 데이터는 경상남도 행정구역의 변경을 고려하여 울산 지역은 제외하였고 2010년 7월 1일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통합하여 창원시가 출범한 것이 반영되었다. <부록>의 <표 A1>은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3. 분석 방법

분석은 다음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산업단지 지역과 비산업단지 지역 간의 결과변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두 번째로, 시군-연도 패널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변수가 0 이상의 집계자료(count data)이고 상답소가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성폭력 상담 건수(overdispersion ratio: 13.73)와 피해 지원 건수(overdispersion ratio:

43) 오병기,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의 인과관계 분석: 투자적지출의 경제적 기능 분류에 따른 동태적 패널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8권 3호, 2014, p. 145.

76.06)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과분산 분포의 형태를 보인다. 이에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모형을 추정한다.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군별 지역(21개)과 연도(11개)로 구성된 위계적 자료 구조를 고려하여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HLM))을 활용한다. 각각의 가설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가설1. } Y_i &\sim NB(\mu_i, \theta), \quad \log(\mu_i) = \beta_0 + \beta_1 D_i + \sum_{k=4}^7 \beta_k X_{ki} \\ \text{가설2. } Y_{it} &= \beta_0 + \beta_1 D_i + \beta_2 S_{it} + \beta_3 D_i S_{it} + \sum_{k=4}^7 \beta_k X_{kit} + u_i + v_t + \varepsilon_{i,t} \end{aligned}$$

가설 1의 회귀식에서 Y_i 는 종속변수 (여성폭력 상담 건수, 피해자 지원 건수)이며 D_i 는 산업단지 더미, 통제변수는 X_{ki} 로 표기하였다. 가설 2의 종속변수 Y_{it} 는 지역 i , 연도 t 의 여성 투표율이며 S_{it} 는 제조업 노동자 성비를 의미한다. u_i 와 v_t 는 각각 지역과 연도의 절편 효과, 오차항은 $\varepsilon_{i,t}$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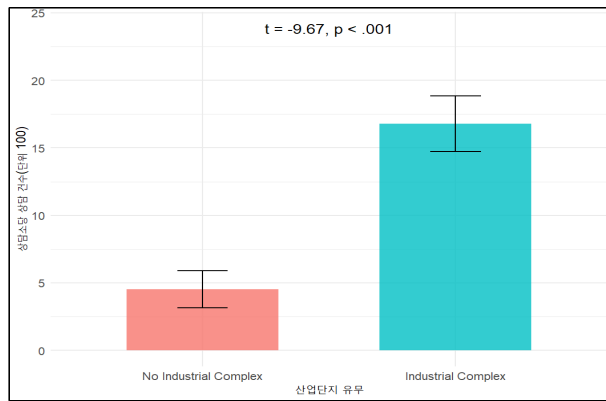
IV. 분석 결과

1. 기술 통계 및 t-test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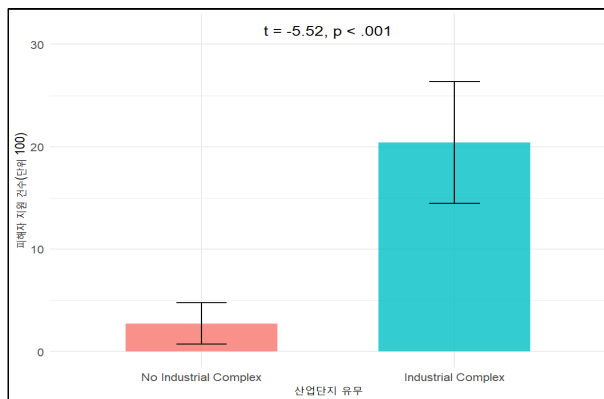
경상남도의 산업화 지역과 비산업화 지역에서 실제로 결과변수의 평균적인 차이가 발견되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변수들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산업단지 유무에 따른 상담소당 여성폭력 상담 건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그림 1>이 보여주듯이, 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지역의 상담소당 여성폭력 상담 평균은 16.80건으로 산업단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상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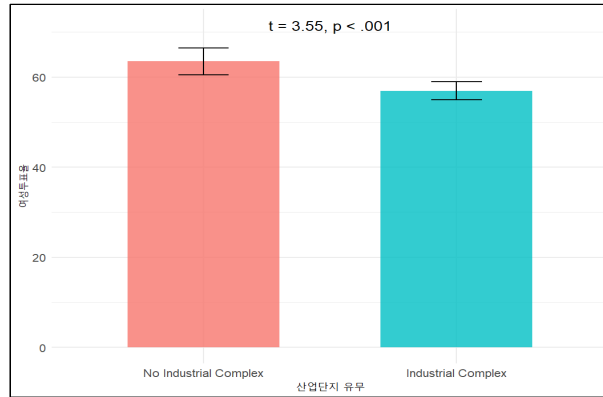
인 4.53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9.67$, $p<.001$). 산업단지 유무에 따른 상담소당 피해자 지원 건수의 평균 차이는 여성 폭력 상담 수보다 더 컸다. 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피해자 지원은 평균 20.43건이었던 반면 산업단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평균 2.74건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5.52$, $p<.001$). <그림 2>는 이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1> 산업단지 유무에 따른 평균 상담 건수 (95% 신뢰구간)



<그림 2> 산업단지 유무에 따른 평균 피해자 지원 (95% 신뢰구간)



〈그림 3〉 산업단지 유무에 따른 여성 투표율 (95% 신뢰구간)

그리고 산업단지 유무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 투표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그림 3〉이 제시하듯이, 산업단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여성 투표율 평균은 63.5%로 나타났으며, 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지역은 평균 57.0%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평균적으로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아닌 지역보다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 결과,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t=3.55, p<.001$). 해당 결과를 해석하자면, 경상남도의 비산업화 농촌 지역 역시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지만, 산업단지는 노동시장 구조와 맞물려 성별 분리와 남성 중심 조직문화가 결합된 공간이다. 이러한 특성은 산업단지 지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구조적으로 더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회귀 분석

이 절에서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은 대체로 도시화가 더 진행된 곳으로 인구 규모, 세수 기반, 물리적 인프라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의 차이는 산업단지 그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한 영향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통

제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1] 경상남도 산업단지과 상담소당 여성폭력 상담 건수

	(1)	(2)	(3)	(4)
산업단지	2.369*** (0.175)	1.585*** (0.167)	3.139*** (0.693)	
log(인구)		2.873*** (0.185)	1.889*** (0.186)	2.159*** (0.193)
log(지방세)		-1.847*** (0.143)	-0.612*** (0.162)	-0.610*** (0.164)
순 이동 (단위 100)		0.008*** (0.002)	0.005*** (0.002)	0.006*** (0.002)
여성고용률			0.092*** (0.011)	0.080*** (0.006)
산업단지 X 여성고용률			-0.045*** (0.013)	
Constant	0.381*** (0.144)	1.525 (1.050)	-13.810*** (1.566)	-15.587*** (1.492)
Observation	408	408	408	408
Dispersion	1.045	1.003	0.919	0.95
Akaike Inf. Crit.	2,346.656	2,148.626	2,017.540	2,052.291
theta	0.406*** (0.037)	0.791*** (0.080)	1.185*** (0.127)	1.007*** (0.102)

Not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NBR)

*p<0.1; **p<0.05; ***p<0.01

〈표 1〉은 산업단지 지역이 여성폭력 상담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모델 (1)에서는 산업단지 지역 여부가 여성폭력 상담 건수에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모델 (2)를 통해 인구 규모, 지방세, 순이동(전입-전출)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산업단지 유무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p < .001$). 이는 단순히 인구가 많거나 도시가 발전하여서 여성폭력 상담 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여성들이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상담을 더 많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업단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메커니즘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여성들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젠더폭력에 더 취약해져서 실제로 산업단지 지역에서 여성폭력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여 상담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산업화 지역에서 여성들이 더 폭력에 민감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했을 수 있다. 모델 (3)에서는 산업단지 유무와 여성고용률의 상호작용이 여성폭력 상담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단지 지역에서 여성폭력 상담은 늘어나지만 여성고용률은 이러한 경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4)를 통해 산업단지와 무관하게 여성고용률이 높은 지역에서 여성폭력 상담 건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p < .001$). 이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단순한 고용지표를 넘어, 여성의 경제적 자립성 증가 및 제도 접근성 강화로 이어져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단지의 존재와 여성고용률은 각각 여성폭력 상담 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산업단지가 미치는 영향은 일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제시한 산업단지의 두 가지 메커니즘 중, 실제로 산업단지가 젠더폭력을 증가시킨다는 전자의 해석이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여성고용률, 인구 등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폭력 상담 건수가 더 많은 것은, 해당 지역이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해왔으며, 이로 인해 젠더 불균형을 통한 젠더폭력의 구조적 위험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산업단지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여성 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여성들이 직

장이라는 공적 공간을 통해 제도적·경제적 자원에 접근하고,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연대와 대응 역량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 개인의 협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위험 상황에 대한 감수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폭력 상황에 놓일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경상남도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역 여성운동이 활성화되어 왔으며, ‘경남여성회’ 등은 직장 내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소 설립 등을 지속해왔다.⁴⁴⁾ 또한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등도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노동조합은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주요한 통로로 기능해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21년 발간한 『여성노동자 반짝이다』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장 안에서의 권리를 확보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연대자로 성장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⁴⁵⁾ 비록 여성고용률의 증가가 곧바로 노동조합 가입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여성의 공적 공간 진입과 노동자 간 네트워크 확대는 권리 인식과 연대 형성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대는 피해 상황에 대한 조기 인식, 심리적 지지, 제도적 대응 경로에 대한 정보 공유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거나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선택지를 제공한다. 추후 여성폭력 발생 데이터를 확인하여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 실제로 여성들의 폭력에 대한 노출이 줄어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4) 이해숙, “지역여성운동의 조직과 세력화의 전망.” 『한국여성학』 제28권 4호, 2012, pp. 39~83.

45)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노동자 반짝이다 (공장에서 거리에서 만난 조금 다른 목소리: 금속노동 여성운동사)』, 서울: 전국금속노동조합, 2021.

〈표 2〉 경상남도 산업단지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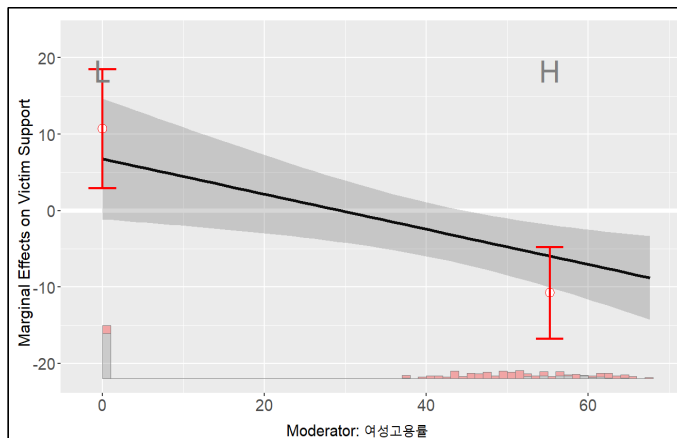
	(1)	(2)	(3)	(4)
산업단지	3.086 ^{***} (0.219)	1.711 ^{***} (0.190)	1.483 ^{**} (0.645)	
log(인구)		2.861 ^{***} (0.193)	1.882 ^{**} (0.209)	2.006 ^{***} (0.199)
log(지방세)		-1.467 ^{***} (0.143)	-0.155 (0.178)	-0.138 (0.171)
순 이동 (단위 100)		0.002 (0.002)	-0.0001 (0.002)	-0.0001 (0.002)
여성고용률			0.089 ^{***} (0.010)	0.091 ^{**} (0.007)
산업단지 X여성고용률			-0.017 (0.012)	
Constant	-0.142 (0.181)	-5.882 ^{***} (1.136)	-22.167 ^{***} (1,710)	-23.516 ^{***} (1.630)
Observation	408	408	408	408
Dispersion	0.95	0.974	0.88	0.88
Akaike Inf. Crit.	2,133.580	1,897.388	1,761.118	1,770.836
theta	0.262 ^{***} (0.023)	0.673 ^{***} (0.072)	1.058 ^{***} (0.121)	1.001 ^{***} (0.113)

Not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NBR)

*p<0.1; **p<0.05; ***p<0.01

〈표 2〉는 산업단지 지역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음이항 회귀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건수도 1970년대 산업화가 된 지역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제변수 없이 분석한 모델 (1)에서는 산업단지 지역 여부가 여성폭력 피해 지원 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통제 변수를 추가하여도 산업단지 유무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단지 여부와 여성고용률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델 (3)에서 산업단지와 여성고용률은 피해자 지원 건수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고용

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산업단지와 여성고용률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효과를 완화하였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고용률의 효과만 확인한 모델(4)를 통해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건수가 다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폭력 피해 인식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구조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산업화 지역이 피해 지원 건수에 미치는 한계효과

〈그림 4〉는 모델 (3)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화가 피해 지원 건수에 미치는 한계 효과가 여성고용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4〉에 따르면, 여성고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산업단지가 존재할 경우 피해자 지원 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여성고용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피해자 지원 건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산업단지의 존재가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에 따라 다른 제도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가설1-1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가 여성폭력 위험을 유발하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성이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경우 그러한 구조적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제도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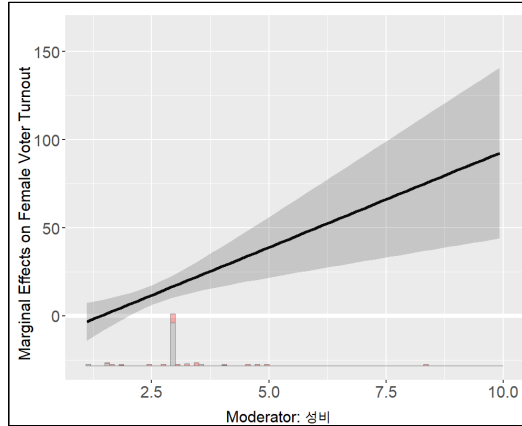
〈표 3〉 경상남도 산업단지와 여성의 투표율

	(1)	(2)	(3)	(4)
산업단지	-1.371 (0.973)	-0.801 (0.911)	-5.394** (2.550)	
log(인구)		-3.321*** (1.193)	-2.989** (1.148)	-3.145*** (1.156)
log(지방세)		-0.259 (0.925)	0.263 (0.885)	0.307 (0.901)
순 이동 (단위 100)		-0.016 (0.010)	-0.020* (0.010)	-0.020** (0.010)
성비			-2.610*** (0.827)	-1.089*** (0.330)
산업단지 X 성비			1.798** (0.894)	
(Intercept)	27.255*** (9.454)	70.432*** (12.456)	64.040*** (12.421)	60.665*** (12.534)
AIC	1359.26	1,329.581	1,318.761	1,322.195
BIC	1376.14	1,356.583	1,352.514	1,349.197
Observation	216	216	216	216

Note: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p<0.1; **p<0.05; ***p<0.01

〈표 3〉은 산업단지 여부와 여성 투표율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을 추정된 결과를 보고한다. 모델 (3)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제조업 노동자 중에서 남성 성비가 클수록 여성 투표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호작용항 $\beta=1.789$, $p<0.05$). 가설 2에 부합하게, 산업단지 제조업 남성 노동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구조적 차별이 뚜렷해지면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되는 것이다.



〈그림 5〉 산업화 지역의 여성 투표율 한계 효과

〈그림 5〉는 산업단지 유무와 제조업 종사자 성비의 상호작용이 여성 투표율에 미치는 한계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성 중심 제조업 구조가 뚜렷한 지역일수록, 산업단지가 존재할 때 여성의 정치적 대응이 더욱 강화되어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V. 결론

이 연구는 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산업단지 지역 여부가 여성의 여성폭력 상담 및 지원 건수와 여성 투표율에 미친 영향을 각각 음이항 회귀분석과 위계적 선형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화가 오늘날 성차별을 어떻게 강화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여성의 젠더폭력에 대한 반응과 정치참여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산업단지 지역 여부는 여성폭력 상담 및 지원 건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상담 및 지원 건수는 비산업단지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젠더폭력 건수가 증가했거나 상담 및 지원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환경에서 제도를 활용하

는 빈도도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지역 여부가 여성 투표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 종사자 중 남성의 성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화로 인해 젠더화된 경제구조가 여성의 사회적 권리(폭력 피해에 대한 제도 활용)와 정치적 권리(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첫째, 한국정치경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됐던 산업화의 성별 효과를 경상남도를 사례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산업화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 사회적 취약성, 정치참여에 어떠한 장기적 영향을 형성해왔는지를 구체적인 지역단위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산업화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 권력구조를 재생산하는 지속적인 구조적인 역사적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1970년대 산업단지 개발 여부가 수십 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여성폭력 대응과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산업화의 장기적 영향력을 조명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젠더 기반 직무 분리와 위계구조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산업화와 젠더 불평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후속 연구 작업이 될 것이다.⁴⁶⁾ 셋째, 본 연구는 여성이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제약을 경험하면서 여성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단순한 피해자나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에서도 제도적 자원을 활용하고 정치 참여를 하는 주체적 행위자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본 연구는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정된 지역적 범위와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현재 공공 데이터상으로는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 또는 산업단지별 여성의 고용률, 수입 등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데이터와 성별 간 투표율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후 이를 보완할 수 있다면 성별 임금 격차와 정규직 여부 등을 고려하거나 읍면동 수준에서 지역적 경계를 세분화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6) 이 점을 지적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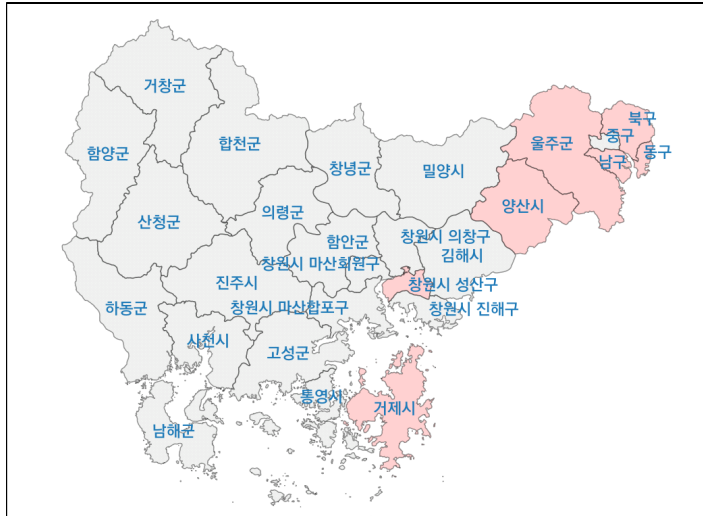
- 강원택,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파주: 나남, 2010.
- 강이수,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미니즘 연구』 제7권 2호, 2007.
- 권혁용·한서빈, “소득과 투표 참여의 불평등: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 『정부학 연구』 제24권 2호, 2018.
- 김경희, “여성노동자의 작업장 생활과 성별분업: 197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1권 1호, 2005.
- 김기동·이재묵, “건강상태와 투표참여의 성별 격차: 소득의 조건효과.” 『정치정보연구』 제26권 3호, 2023.
- 김성연,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 201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2권 4호, 2015.
- 김수영,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가족-여성.” 『뉴 래디컬 리뷰』 제7권, 2001.
- 김춘수, “1960~70년대 국가의 여성 배제 전략: 기술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2권, 2003.
- 김현경, “국제인권체제에서의 ‘젠더폭력’ 개념의 형성.” 『아시아여성연구』 제63권 2호, 2024.
-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제16권 1호, 2000.
- 박미현, “광역자치단체의 여성폭력방지 조례에 관한 비교연구.” 『글로벌사회복지연구』 제14권 2호, 2024.
- 박영민·이나영, “‘새로운’ 페미니스트 운동의 등장?: <불편한 용기>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 2019.
- 백승아, “1980년대 울산지역 여성운동: 지역의 공업화-민주화 과정에서 여성 주체 형성을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제14권 2호, 2023.
- 서복경, “투표 불참 유권자집단과 한국 정당체계.” 『현대정치연구』 제3권 1호, 2010.
- 송영호·최영미, “이주배경청년의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 국적과 출생지, 젠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22권 2호, 2021.
- 신상숙,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 통합적 접근의 모색.” 『페미니즘 연구』 제18권 1호, 2018.
- 안이슬·박보영, “기업 특성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시아 6개국 제조업 기업 통계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경제발전연구』 제23권 3호, 2017.
- 오병기,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의 인과관계 분석: 투자적지출의 경제적 기능 분

- 류에 따른 동태적 패널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8권 3호, 2014.
- 이갑윤,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제26권, 2008.
- 이지연, “산업화 시기 한국 국가의 인력 양성 정책과 젠더 불평등.” 『현상과인식』 제39권 1/2호, 2015.
- 이현영·임엽·최예슬·김민영, “수도권 임금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 직종 숙련특성에 따른 직종 간 임금격차와 직종 내 성별 임금격차.” 『지역연구』 제30권 4호, 2014.
- 이혜숙, “지역여성운동의 조직과 세력화의 전망.” 『한국여성학』 제28권 4호, 2012.
- 장은영, “들불야학 여성 노동자의 자기서사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59권, 2014.
-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노동자 반짝이다 (공장에서 거리에서 만난 조금 다른 목소리: 금속노조 여성운동사)』, 서울: 전국금속노동조합, 2021.
- 조성대,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제40권 2호, 2006.
- 한정훈·강현구,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행위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사례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8권 1호, 2009.
- 황아란, “선거환경변화가 당선경쟁과 투표율에 미친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2호, 2008.
- “남녀 임금 격차 40% 넘는 지역은 '전남·울산'...이유는?” 『연합뉴스』, 2023년 6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6112800530?input=1195m> (검색일: 2025.4.25.).
- Aizer, Anna, “The Gender Wage Gap and Domestic Viol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0, No. 4, 2010.
- Beramendi, Pablo, and Christopher J. Anderson, *Democracy, Inequality, and Represent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Russell Sage Foundation, 2008.
- Brady, Henry E., Sidney Verba, and Kay Lehman Schlozman,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9, No. 2, 1995.
- Bybee, Deborah I., and Cris M. Sullivan, “The process through which an advocacy intervention resulted in positive change for battered women over tim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0, 2002.
- Clayton, Amanda, Diana Z. O'Brien, and Jennifer M. Piscopo, “Women Grab Back: Exclusion, Policy Threat, and Women's Political Ambition.” *Americ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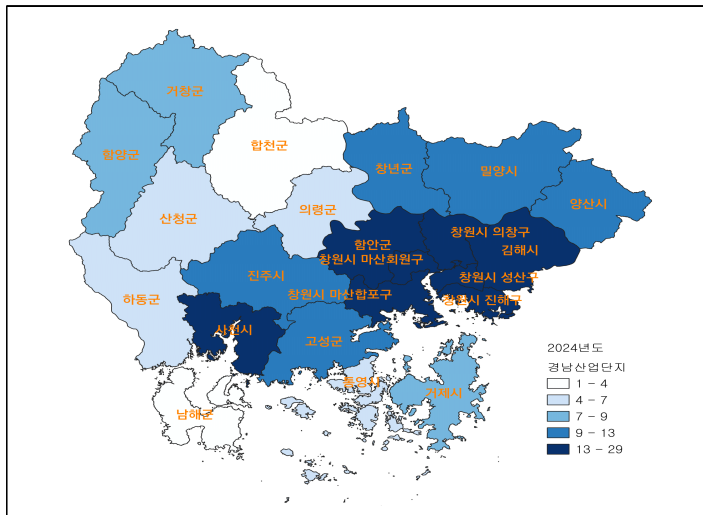
-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17, No. 1, 2023.
- Coffé, Hilde, and Catherine Bolzendahl, C, "Same Game, Different Rules? Gender Differenc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Sex Roles*, Vol. 62, No. 5-6, 2010.
- Dahlerup, Drude, "Confusing Concepts – Confusing Reality: A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Patriarchal State." In Anne Showstack Sassoon, ed., *Women and the State: The Shifting Boundaries of Public and Private*, London: Unwin Hyman Ltd., 1987.
- Goodman, L, Ma Dutton, N Vankos, and K Weinfurt, "Women's resources and use of strategies a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reabuse over time." *Violence Against Women*, Vol. 11, No. 3, 2005.
- Hamby, Sherry L., and Bernadette Gray-Little, "Responses to Partner Violence: Moving Away from Deficit Model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1, No. 3, 1997.
- Han, Jongwoo, and L. H. M. Ling, "Authoritarianism in the Hypermasculine State: Hybridity, Patriarchy, and Capitalism in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2, No. 1, 1998.
- Hartmann, Heidi, "Capitalism, Patriarchy and Job Segregation by Sex," *Signs*, Vol. 1, No. 3, 1976.
- Hernes, Helga Maria, *Welfare State and Woman Power: Essays in State Feminism*. Norwegian University Press, 1989.
- Hong, Ji Yeon, and Sunkyoung Park, "Factories for Votes? How Authoritarian Leaders Gain Popular Support Using Targeted Industrial Polic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6, No. 3, 2016.
- Hong, Ji Yeon, Sunkyoung Park, and Hyunjoo Yang, "In Strongman We Trust: The Political Legacy of the New Village Movement in South Kore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7, No. 4, 2023.
- Inglehart, Ronald, and Pippa Norris, "The Developmental Theory of the Gender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1, No. 4, 2000.
- Jenkins, Jeffery A., and Jared Rubin, editors, *The Oxford Handbook of Historical Political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4.
- Jessop, Bob, *State Power: A Strategic Relational Approach*, Cambridge: Polity Press, 2007.

- Kaukinen, Catherine, "Status Compatibility, Physical Violence, and Emotional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6, 2004.
- Liang, Belle, Lisa Goodman, Pratyusha Tummala-Narra, and Sarah Weintraub,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elp-seeking processes among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6, No. 1-2, 2005.
- Mahler, Vincent A., "Electoral Turnout and Income Redistribution by the State: A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Developed Democrac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47, No. 2, 2008.
- Ogle, George E., *South Korea: Dissent within the Economic Miracle*. London: Zed Books, 1990.
- Rai, Shirin M., "Women and the State in the Third World: Some Issues for Debate." In Shirin M. Rai ed., *Women and the State: International Perspectives*. London: Taylor & Francis, 1996.
- Raymond E. Wolfinger and Steven J. Rosenstone,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 Tauchen, Helen, and Ann Dryden Witte, "The dynamics of domestic viol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No. 2, 1995.
- Waylen, Georgina, *Gender in Third World Politic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6.

부록



〈그림 A1〉 1974년 경상남도 산업단지 위치



〈그림 A2〉 2024년 기준 경상남도 산업단지 수

〈표 A1〉 기술통계⁴⁷⁾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상업소 개수	1.65	1.67	0	9	408
여성폭력 상당 건수	2217.76	3436.97	0	20354	408
피해자 지원 건수	1748.47	4339.01	0	36477	408
여성고용률	52.07	7.65	33.6	67.6	408
여성 투표율	58.92	8.84	32.70	78.90	216
제조업 성비	3.30	1.66	1.12	9.92	216
인구	163031.70	196267.57	27518.00	1107341	408
지방세	307140105.67	572037065.89	13739802	6786913000	408
순이동	-780.86	3655.56	-13562.00	19960	408

47) 기초통계량을 원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 변수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스케일이 조정하였다.

Abstract

Industrialization and Women:
The Long-Term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on Gender-Based Violence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Seo Yeong Park (Korea University)
Hyeok Yong Kw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ong-term effects of 1970s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in Gyeongsangnam-do on gender-based violence support services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dustrialized areas show higher levels of counseling and victim support than non-industrialized areas. Within these areas, higher female employment correlates with lower use of such services, while a greater share of male manufacturing workers is linked to higher women's voter turnou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dustrialization exposed women to greater risks of violence and labor market inequality, yet also spurred engagement with institutional resourc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tudy advances the gendered political economy literature by showing how industrialization both reinforces gender inequality and shapes women's responses.

Keywords: Industrialization, Gender inequality, Gender-based Violence, Women Voters, Political Participation, Gyeongsangnam-do

투고일: 2025년 7월 7일, 심사일: 2025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5년 8월 8일